

기획

‘총학위기론’ 해결의 실마리는 역할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합의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총학생회(총학)는 대학생 자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따라 학생도, 대학도, 사회도 변화했고 총학 역시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제기되는 총학 위기론은 총학에게 거듭날 것인가 퇴조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적 질문이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의 실마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한 때다.

총학, 나아가 학생자치가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에 통상 가장 빈번하게 불려 나오는 근거는 총학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매년 낮은 투표율과 출마 선본 부재로 인해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대학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 수 있다. 당장 우리학교 서울캠과 스(서울캠) 또한 작년 전반기를 총학 없이 비대위 체제로 보냈다. 또 연세대는 지난해까지 3년이라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긴 총학 공백 상태를 겪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학교에서 치러진 선거들을 돌이켜 보면 총학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 드문 편이었다. 47대부터 51대에 이르기까지 5년의 임기 동안 서울캠과 국제캠(국제캠) 양쪽을 통틀어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던 것은 세 번이었다. 49대와 50대, 단선으로 진행된 서울캠 선거에서 찬성 표 부족으로 낙선한 경우가 두 번이었고, 다른 한 번은 48대 국제캠 총학의 조기 사퇴가 원인이었다. 이 기간에 우리학교에서 투표율이 부족하거나 출마자가 없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총학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우리학교의 학생자치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성급해 보인다. 그보다는 투표 결과가 총학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총학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총학의 역할에 대해 학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대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변우성(사회학 2018)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총학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길을 지나다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볼 때나 축제 때 정도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 씨는 “총학이 학교나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같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은정(영어영문학 2015)씨는 “총학 선거에 참여했을 때 학생복지 공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총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지개선이나 수업환경 개선, 시설관리 등의 사안에 있어 학생들

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이 예전과 같은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재식(철학 2016)씨는 “총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모아 대신 외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총학이 단순히 학생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나 시간강사 등 학내의 다른 구성원과 연대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쪽에는 학생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학업, 복지 등의 영역에서 학생 편의를 증진시키는 유능한 관리자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앞장서서 의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생 집단의 대표자로서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정부를 향해 발언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다. 편의를 위해 전자를 ‘행정가 모델’, 후자를 ‘선봉장 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총학을 향한 요구들은 두 모델에 따라 명확히 나뉘기 보다는 구분되는 방향의 경향이 존재하는 스펙트럼 상에 위치해 있다.

현재 우리학교 총학의 직접적인 기원은 군부독재 시기였던 198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학은 권위주의, 국가주의 성격이 짙은 학도호국단을 대신하는 대학의 학생자치조직으로서 등장했다. 총학 출범과 함께 제정된 「총학생회 회칙」 전문에서는 학도호국단을 ‘유신잔재’로 규정했다. “이 땅의 민족자주성의 실현, 민주사회의 건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과 이 학원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한 자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대학생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총학이라는 조직의 출범 자체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사회의 건설’, ‘학원내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같은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 ‘선봉장 모델’의 구현에 입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총학의 모습도 변화를 겪었다. 총학 선거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운동권 성향 선본의 목소리가 학생들이 마주한 사회, 경제적 현실과 괴리되자 점차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른바 ‘비권(비운동권)’ 선본이 각광 받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겠다는 ‘행정가 모델’ 총학의 면모가 강조됐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8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 치하였고 90년대 또한 그 연장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독재타도’, ‘민주화 완성’ 같은 단일 거대담론으로 학생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을 이루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학생 사회 내의 요구도 다양해질 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총학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변화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과거 학생자치가 지식인으로서 대학생의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했다면 지금의 학생자치는 개인의 편의와 성취를 보다 중시하게 된 것이고 이런 현상이 가치판단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형(일본어학 2011) 국제캠 제 50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이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의제를 던지고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기가 힘들어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별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면서 “이들테면 총장선출제 같은 학생들의 지지와 총학의 의제 선정이 필요한 사안들보다는 학생복지나 행사 관리, 민원 수리 같은 영역의 정책들이 훨씬 관심도 많이 받고 호평을 듣기도 쉽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학생들이 느끼는 즉각적인 효능감의 차이를 원인으로 해석했다. 명백한 투쟁 상대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선봉장 모델’이 필요한 영역의 사안들은 너무 복잡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김 전 회장은 “임기 동안 학교가 총학을 진지한 논의의 파트너로 여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학생자치가 성립하려면 학교가 총학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적 권한이나 전문 인력을 갖춘 기구가 아닌 총학이 학교를 상대로 발언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사실뿐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결국은 복지 정책과 민원 수리 같은 영역의 활동들도 원동력을

가지려면 총학이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주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이 교수는 “결국 문제는 총학이 스스로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총학과 단위별 학생회들이 말로는 운동권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해도 실제 활동을 보면 7,80년대 학생조직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회 선거가 비슷비슷한 내용에 선심성 경쟁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학생과 학생회 양쪽에 학생회가 뭉치는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회의 역할과 규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